



유럽지역 기항 국적선 52척 안전 중점관리

2002년 이후 안전관리 중간국가에 머물러

해양수산부는 우리나라 선박의 안전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해 유럽지역에 기항하는 선박에 대한 안전관리를 한층 강화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우리나라 선박의 안전관리 수준이 많이 개선돼 아·태지역에서는 2003년부터, 미국에선 2005년부터 선박안전관리 우수국가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유럽지역에선 2002년 이후 아직껏 안전관리 중간국가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따라 해양부는 유럽지역에서의 선박안전관리 우수국가로 진입하기 위해 이 지역에 기항하는 52척의 취약선박에 대해 국내항만 출항전에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중점 관리할 예정이다.

또 선령 15년을 초과하는 노령선박과 내항에서 외항으로 사업구역을 변경한 선박에 대해 반기마다 안전점검을 실시해 국적선박이 외국항 항만국통제로 인해 출항정지되는 것을 사전 예방할 계획이다.

우리나라가 유럽지역에서 선박안전관리 우수국가 지위를 획득할 경우 아·태지역 및 미국을 포함한 세계 주요지역에서 선박안전관리 우수국가 지위를 획득하게 돼 명실상부한 해양안전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게 된다.

이와함께 해양부는 외국선박에 대한 항만국통제를 강화해 우리나라에 기항하는 국제안전기준 미달선박에 대한 운항통제도 강도높게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출항정지율이 매우 높은 몽고, 베트남, 캄보디아 등의 국가에 등록된 선박에 대해 점진인력을 집중 투입해 항만국통제의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

한편, 유럽지역에서 우리나라가 선박안전관리 우수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출항정지율이 3년간 평균 2% 미만이어야 하는데, 2.5%를 웃돌고 있다.

부산 정치권 '부산해양특별자치시' 설치추진

한나라 유기준 의원, 특별법안 대표발의키로

부산시 등이 추진해 온 '부산해양특별시' 대신 '부산해양특별자치시' 설치 방안이 부산 정치권에 의해 추진되고 있어 성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는 부산해양특별시에 대한 타 지역 의원들의 반대가 거세 내용은 엇비슷하되 '자치시'라는 문구

를 넣어 반감이 없는 명칭을 들고나온 것이다. 한나라당 유기준(부산 서구) 의원은 2월11일 이 같은 내용의 '부산해양특별자치시 설치 및 발전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의원들의 동의를 받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